



봄의 색 일렁이는 가파도 가파도에 바람이 넘실대면 누렇게 익어가는 보리와 갯무꽃이 봄의 색을 겨누며 일렁인다. 마스크를 내려놓고, 봄이 내뿜은 들녘의 향기를 깊은 들숨으로 들이마시고 싶은 2022년의 봄, 5월이다. / 사진 이창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생협력 협약

의회 간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강화, 인사교류 적극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5월 12일 의사당 1층 제1소회의실에서 양 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

한 가운데 공동 이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상생협력 제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에서 수용해 체결하게 됐으며,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민복지증진 정책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교류간담회 개최, 의회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좌남수 의장은 상생협력 협약식 자리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지방분권 시대에 양 의회가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교류의 폭을 넓혀 양 의회의 역량이 높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지면 안내

제404회 임시회 ▶ 2



주요 이슈 ▶ 3

함께 합시다 ▶ 6~7

사무처 소식 ▶ 8

# “고뇌에 찬 결단, 도민 여러분의 양해와 이해 바란다”



## 제404회 임시회 개회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급박하게 추진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구 확정과 관련해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도 의원정수가 2명 증원에 그친 데 대해서는 “정치권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좌남수 의장은 4월 25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마침내 선거구 확정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현행 43명에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 늘리는 것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명 증원(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에 그치면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좌남수 의장은 “당초 도의원 정수를 세 명 증원하는 것이었으나 정치권의 무책임으로 인해 두 명 증원에 그치면서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졌

다”며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건넸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폐합 대상이 된 일도2동 갑·을 선거구 주민들께선 당혹스럽고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제주도선거구획정 위원회가 고뇌에 찬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어서 도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이해를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했다.

동료 의원들에게는 “한 달여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확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만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개정 조례안 처리에 따른 협조를 당부했다.

## 선거구획정 조례개정안 의결... 제주시 아라동-애월읍 분구

###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4월 25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재적의원(2명 사직) 41명 중 34명이 투표에 참여해 28명이 찬성표(반대 6명)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강민숙·박호형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지난 4월 15일 국회

는 제주도의원 정수를 증원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법정기한을 넘겨 국회가 의결한 법안은 제주도민의 정서와는 완전히 괴리된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2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각각 갑·을 선거구로 분구됐다.

또 제주시 연동 44동을 갑에서 을 선거구로 변경하는 등 선거구역을 일부



조정했다. 반면 지금까지 갑·을 2개로 나눠졌던

제주시 일도2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됐다.

## 일도2동 갑·을 통합 ‘본회의 표결로’

###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통합하는 선거구획정 조례가 해당 지역 도의원의 거센 반발 속에 본회의 표결을 마무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4월 25일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별도의 판단 없이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적용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문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판가름 났다.

이날 조례안 심사는 시작부터 일도2동을 선거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 속에 시작됐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확정위가 많은 고심과 고뇌에 찬 활동을 했고 특히 올 4월 들어서는 짧은 시간 동안 상당한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지역은 섭섭하고 안타깝고 쓰라린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선거구획정



위원들도 잘 알고 있다”며, “아프지만 대의를 위해 조금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도민사회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선거구획정 조례안 처리에 따른 협조를

당부했다. 결국 행정자치위원회는 가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체 의원들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제1차 본회의로 넘겼다.

# 농수산분야 피해 막대, CPTPP 가입반대 결의안 채택

##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4월 19일 제403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을 상정의결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농어업인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농수축

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을 중단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메가FTA인 CPTPP는 농산물 95%, 수산물 100% 관세철폐로 인해 매년 농업분야는 4,400억 원, 수산분야는 724억 원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의 일방적인 가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CPTPP 관련 농어업인에게 해명과 사과, CPTPP 관련자료 대국민 공개·홍보, FTA 피해



보전제도 보완·강화 등 농어업인의 피해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재밋섬 건물 매입’ 전면 중단 재요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4월 26일 오전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과 관련한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절차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하 문광위)는 지난 3월 30일, 재밋섬 건물매입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매입 관련 일체의 절차이행 중단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제주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도 문화정책과는 해당 상임위원회 입장 전달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5일 공문을 통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사업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문광위는 “재밋섬 건물매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적정 처분요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처리된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조건부로 제시된 재원확보 방안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안창남 위원장은 “지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인 어수선한 시기에 집행부의 졸속 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거 4년 전,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도지사의 직무 정지 기간에 매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사전 절차 이행을 누락시켜 지금의 논란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위원장은 “민선8기 도정 출범 또한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새로운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도민사회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 “도민과 함께,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찾게 된 소중한 일상을 도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민·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관 협력을 통해

그동안 발굴한 과제를 공유하고,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3인 공동위원장인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4개 분과 45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재개에 발맞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역의료 대응체계 전환으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간 소



비 활력 제고,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회복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 “농가소득 향상 위해 공영도매시장 도입 적극 검토”

## 농수축경제위원회·제주연구원 공동 정책토론회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 및 물류체계 개선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와 제주연구원은 공동으로 4월 19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물 유통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 농업의 특화성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지부로 출하되는 농산물 물류비를 농업인들이 전부 부담하는 현재의 유통 구조로는 제주 농업의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산물 유통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농업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안경아 책임연구원은 “제주 농업은 온난한 기후 여건을 활용하여 도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해 왔지만, 유통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익악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농산물 소비구조 및 유통경로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제주지역에도 공영 도매시장 도입 필요성이 나타난다”고 발표했다.

좌장을 맡은 강성균 의원도 “제주 농업을 둘러싼 환경요인의 변화와 유통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농가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빅데이터와 디지털 체계를 바탕으로 발달하고 있는 물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효율적인 농산물 물류체계의 한 방안으로 공영도매시장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지역에 LNG가 도입되면

서 폐냉열을 활용한 콜드체인시스템 구축도 손쉬워진 상황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높다”며,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공영도매시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도출되었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만큼 앞으로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

## 해양수산자원 지속 관리 플랫폼 구축

### 도의회-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좌남수 의장)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춘우 이사장)이 제주도 해양수산자원 지속적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 간담회는 4월 29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제주도 수산자원관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도내 해양수산기관 대표를 초빙해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관·연 통합관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제주도 연안해역의 갯녹음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위해 바다숲 조성 관리사업, 수산자원 증대사업, TAC관리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부원장을 좌장으로 해양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예측고도화,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 제주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해양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 조성된 수산자원조사사업인 어초어장, 해중림, 바다숲, 연안바다목장화 등 수산자원 벨트화를 위한 (가칭)수산자원 관리 상설정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도



의회·도·공단·연구원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수산자원 보호 및 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국회 송재호 의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춘우 이사장,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박광재 소장,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최미경 본부장,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김진서 지사장,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이승호 센터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부원장,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국 정재철 과장,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고희범 원장이 참석했다.

## 가격폭락 양파 농가 지원 소비촉진 동참

### 도의회-적십자사 합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와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최근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 양파 생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21일 의장 집무실에서 200만 원 상당의 양파 15kg 200망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물품은 어려운 농가 살리기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과 함께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좌남수 의장은 “가격폭락으로 인한 양파 농가를 돕고, 물품기탁을 통해 어려운 이웃도 함께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특별자치 분권 촉진 관련조례 전부 개정한다”

## 제도적 대안 마련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는 4월 28일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2021년 제주자치도가 실시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하여 응답자의 40.3%가 모른다고 응답했고, 자치권 강화를 위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지역사회 자치역량 수준에 대한 도민들의 50.1%가 낮다고 평가했다”며, “이런 도민의 부정적 평가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정치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주자치도의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에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정책토론회에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 선도지역으로 우뚝 세워지고, 도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정책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제주연구



원 윤원수 책임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강화방안, 지방자치 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강영봉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사무총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장철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장이 토론에 참가했다.

한편 정책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계됐다.



## 제주도의회-충남도의회 발전방안 교류

### 의회 전문성 강화 협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전문위원 백상규)은 4월 18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운영위원회와 의회 전문성 강화 및 의회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백상규 전문위원과 충청남도의회운영위원회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은 결산 대비를 위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역량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황과 함께 지방의회 위상 강화 논의 등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 청탁금지법 Q&A



#### 공공기관과 병원의 할인 혜택 협약체결 허용 여부

**Q** 본인은 ○○시 소속 공무원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우리 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해 주겠다고 하며 협약을 맺자고 합니다. 협약을 맺고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과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할인 혜택은 할인 혜택제공으로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며, 외부압력 등에 따라 협약을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가 본인 외에 가족, 친지 등까지 과도하게 확장된 경우라면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 협약체결 주체 사이에 지도·단속, 민원처리, 입찰참여, 인·허가 등 직접적인 현안으로 인해 밀접한 직무 관계를 가지게 되어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할인 혜택 제공행위가 대가성이 있거나 부정청탁과 결부되어 있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생활 & 법령뉴스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Q**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 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 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 ◇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 예시

- ☞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선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은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 예시

-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 판매업 허가 대상
-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 신기한 제주어 ⑰

## 헤삭이

(부사) 만족한 표정으로 입을 헤벌리고 있는 모양

<예문>

부치러완 머리 수그린 새각시, 그 '자자'의 손을 심은 새스방 토토가 헤삭이 입 벌리멍 혼디 들어산다. 사름덜은 손바닥에 헐리남직이 박수를 치는디, 토토어멍은 눈누람지가 썸박 젖언게마는 그 트멍으로 눈물주베기가 도록도록 떨어진다.

- 부치러완 : 부끄러워서
- 새각시 : 새신부
- 심은 : 잡은
- 새스방 : 새신랑
- 벌리멍 : 벌리면서
- 헐리나다 : 상처나다
- 눈누람지 : 속눈썹을 말함
- 썸박, 솜뿔, 솜뿔, 소뿔, 수뿔 : 가득찬 꼴
- 젖언게마는 : 젖더니만
- 트멍 : 틈
- 눈물 주베기 : 눈물방울
- 도록도록 : 방울방울 떨어지는 모양
- 떨어진다 : 떨어진다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월별	회수	회기	의사일정	주요 처리 안건
계	11회	총 142일 · 정례회 2회/58일 · 임시회 9회/84일	본회의 34일 상임위 54일 예결위 18일 공휴일 36일	· 정례회 2회/58일 · 임시회 8회/83일 → 9회/84일
2월	제402회 임시회	2.8.(화) ~2.17.(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2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3월	제403회 임시회	3.22.(화) ~3.30.(수)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404회 임시회	4.25.(월) (1일)	본회의 1일	· 안건 처리
5월				
6월	제405회 임시회	6.14.(화) ~6.21.(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 8월	제406회 임시회	7.1.(금) ~7.6.(수) (6일)	본회의 3일 상임위 1일 공휴일 2일	· 의장·부의장 선거 · 제12대 의회 개원식 · 원구성 등
	제407회 임시회	7.12.(화) ~7.22.(금)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공휴일 2일	· 주요업무보고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제408회 임시회	7.26.(화) ~8.5.(금)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4일 공휴일 2일	· 제1회 추경예산안 · 안건 처리
9월	제409회 제1차 정례회	9.16.(금) ~10.12.(수) (27일)	본회의 8일 상임위 5일 예결위 4일 공휴일 10일	· 도정·교육 행정질문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410회 임시회	10.18.(화) ~11. 9.(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 행정사무감사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11회 제2차 정례회	11.15.(화) ~12.15.(목) (31일)	본회의 8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8일	· 도정·교육 행정질문 · 2023년도 예산안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12회 임시회	12.19.(월) ~12.23.(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 제2회 추경예산안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9일  
※ 연간 의사일정은 현안사항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진화의 시작

걸음마를 떤 지 어느새 5년이나 된 아이는 요즘 한창 열풍인 포켓몬에 빠져있다. 그 포켓몬들이 진화를 한다며 진화 단계까지 줄줄 읊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언제 이렇게 자랐나 싶다.

그런 아이에게 우리 인류도 침팬지가 진화한 후손이라고 하니 못 믿겠는지 눈을 흘긴다.

우리 인류는 200만 년 전 앞발을 들고 일어서 걷기 시작하면서 진화했다. 직립보행을 하며 시야가 확보돼 사냥감과 적을 찾기가 쉬워지고 자유로워진 팔이 하는 일이 늘어나게 돼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게 됐다.



**오 은 경**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걷기앱 워크온과 함께  
하루 7000보 도전을

두뇌가 발달하고 도구 사용이 가능하게 되며 인류는 먹이사슬의 정점으로 뛰어올랐다.

2021년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10대 사망 원인

중 1위는 암, 그다음이 극단적 선택이다. 걷기는 모든 사망위험과 고혈압, 당뇨, 비만, 우울증, 치매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인지기능을 향상하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서귀포시의 1733(1일 7000보 삼시 세끼 삼삼하게) 건강실천 프로젝트 추진과 더불어 우리 중앙동에서는 주 1회 친절 힐링 플로깅데이 활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원 산책로와 보도 정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 사업을 추진하며 걷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귀포시민이라면 오늘부터 걷기앱 워크온과 함께 하루 7000보에 도전하길 바란다. 스마트폰 때문에 등이 굽어 다시 침팬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 봄철 산악사고 미리 알고 예방하자

봄은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다. 특히 제주만의 아름다운 경치 및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제주의 산과 오름은 등산객들로 북적인다.

더불어 제주의 지리·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타지의 등산객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행 전 알아둬야 할 안전수칙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자신에게 맞는 장소 선정이다. 제주의 경우 험하고 경사진 오름이 많다. 자신의 나이, 건강 상태에 맞지 않



**변 기 환**  
제주소방서  
외도119센터

산행 전 안전수칙 숙지  
휴대폰 배터리 충전해야

는 장소 선택은 몸에 무리를 가하고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기온 급하강에 대비한 보온장비 준비다. 등산 및 하산을 하다 보면 어느

새 어두워져서 산에 고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온이 내려가 저체온증이 올 수 있다. 이를 대비해 보온장비를 미리 준비하자.

셋째 출발 전 충분한 준비운동이다. 산행 전 간단한 스트레칭 및 준비운동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근육과 관절의 가동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혀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등산로 이탈 금지다. 호기심에 정해진 등산로가 아닌 길로 가는 등산객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길을 잃은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위도·경도 프로그램 미리 다운 및 사용법 숙지, 휴대폰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 호루라기를 휴대해 산에 고립 시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

# 야영장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떠나기

국내 3대 배낭 도보여행 중 한 곳이 바로 성산읍 우도 비양도이다.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만큼 곳곳에 유·무료 야영장이 조성돼 있다.

배낭 도보여행 성지를 추가한다면 협재해수욕장 야자수와 소나무 아래 야영장이 강력한 후보이다. 한림 비양도가 보이는 멋진 풍경과 에메랄드빛 바다까지 빠지는 게 없는 장소이다.

제주도에서는 증가하는 야영객 수요를 반영해 유원지 시설을 이용 현황에 맞게 조정하는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 최근 고시했다.

김녕, 광지, 협재해수욕장 주변은 ‘국



**신 유 경**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

유·무료 야영장 조성  
올바른 야영문화 필요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의 기반 시설 중 유원지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오락과 휴양을 위해 무료로 개방된 공간이다.

넓은 해수욕장 중 용도에 따라 구분이 돼있는데 김녕과 협재 유원지는 휴양문화시설 중 야영장이 조성돼 있다.

이번 변경에서는 야영장 이용 현황을 반영해 면적을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재 유원지 야영장은 현재 해안사구 복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야영이 금지돼 있다.

김녕해수욕장 야영장은 한 때 차량 이용 야영객들로 잔디가 훼손되기도 했다.

야영장이 있는 광지, 협재, 김녕 유원지에서 장기 정박 텐트 설치하는 지양하고 쓰레기는 모두 퇴거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떠나기를 실천하자.

이용객들의 올바른 야영문화가 지켜져야만 아름다운 자연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일상의 평범한 발상, 제주정책을 새롭게

##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오는 5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2022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 도민의 시각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제주지역의 현안과 제도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및 발전 방안을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해당 아이디어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공모대상은 총 4개 분야로, 의정 및 도정 발전 방안, 도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방안,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응모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접수는 5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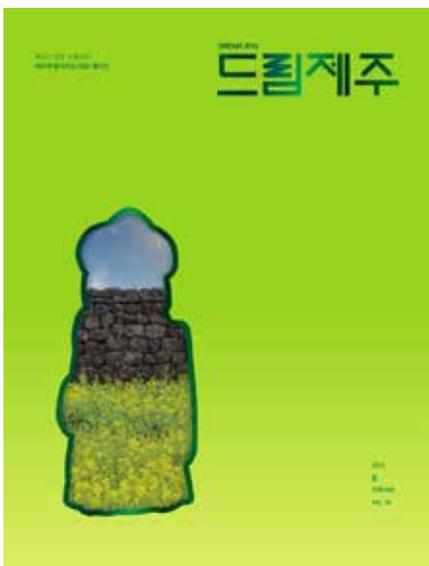
응모작에 대한 심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1차 도의회 내부심사와 2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등 2단계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며, 선정된 수상작은 오는 8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u.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는데,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각 60만 원, 장려상 2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각 4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응모작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도민의 시각에서 발굴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정책을 새롭게 바꾸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평화와 자연의 가치 제주”

## 제주도의회 '드림제주' 봄호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4월 도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매거진 '드림제주' 봄호(통권 제34호)를 발간했다.

드림제주 봄호는 문태길 시인의 시 '유채꽃 피면'을 머리글로 열며, 제주의 4월은 아픔을 딛고 세상으로 나오는 꽃들로 가득한 시간으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제주의 슬픔을 되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봄호 첫 번째 특집은 제주4·3특별법 개정 후 1년을 맞아 이뤄지고 있는

희생자 배보상 방안과 추가 진상조사, 명예 회복을 위한 수형인의 특별 재심 등을 담았다. 두 번째 특집에서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청구 조례 절차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 특집에서는 '제주해녀 항일운동 90주년과 그 주역들'에 대해 박찬식 제주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의 특집 칼럼을 게재했다.

의정칼럼으로는 김태석 의원의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양병우 의원의 '가파도 프로젝트의 재도약 기대', 박은경 의원의 '성공하려면 때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강성균 의원의 '제주농업 미래를 위한 제언'이 실려 주요 이슈와 분야별 의견을 담았다.

좌남수 의장은 발간사를 통해 “올해는 일제의 수탈에 맞서 제주 해녀가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해녀항일운동 90주년, 그리고 제주4·3이 74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웠는지를 생각한다”며, “항일 운동을 주도한 해녀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 등 조명사업과 함께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추가 진상조사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지방의원 포함
- (내용)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기준

신고, 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의무(제5조) ② 직무관련 부동산보유, 매수신고(제6조)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활동내역 제출(제8조)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② 가족채용 제한(제11조) ③ 수의계약 체결제한(제12조) ④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사용, 수익 금지(제13조) ⑤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제14조)

\* 고위공직자 : 지방의회 의원 포함

## • 행위기준별 세부 내용

구분	대상	내용	방법	위반 시 제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	공직자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포함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제출	임용(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충돌방지담당관에게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특수관계 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금전거래, 부동산거래, 물품 용역·공사 등 계약)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	소속 공공기관의 퇴직자(최근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사적접촉 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적 접촉 후 14일 이내 신고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분	대상	제한행위		위반 시 제재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직자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②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 ③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족 채용 제한	공직자	다음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이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	다음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이상의 공직자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등이 자신이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통한 본인·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 추정
		본인·제3자의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